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15. 3

Contents

Part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설계
3. 종합만족도 측정모형
4. 측정문항
5. 응답자특성

Part II. 조사 결과

- | | |
|------------------------------|----|
|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도움 정도 | 8 |
| 2. 현재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적절성 | 9 |
| 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적절성 평가 이유 | 9 |
| 4.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각 분야에 주는 도움 여부 | 11 |

- 1)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 2) 지역 인재 활용 측면
- 3)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측면
- 4) 수도권 집중 완화 측면

- | | |
|-----------------------------------|----|
| 5.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민 행복도 | 13 |
| 6.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대감 | 14 |
| 7. 국가균형발전 정책 우려감 | 15 |
| 8.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더 잘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것 | 16 |
| 9.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향후 역할 전망 | 17 |
| 10. 세종시의 향후 역할 전망 이유 | 18 |
| 11.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더 잘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할 점 | 19 |
| 12.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서 잘 자리잡을지 전망 | 20 |
| 13.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 적응 전망 이유 | 21 |
| 14. 혁신도시가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할 점 | 22 |
| 15.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평가 | 23 |
| 16.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평가 이유 | 24 |

Part I .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설계
3. 자료 처리 방법
4. 응답자 특성표

1. 조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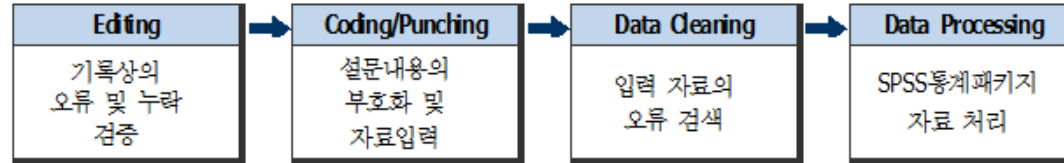
- 본 조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을 맞아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평가를 알아보고, 최근 세종특별시로 정부 청사 이전 완료 및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설계가 안착화 된 시점에서 향후 어떤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그 정책적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알아보기 위해 실시함.

2.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지역 언론인, 균형발전정책 유관 학계 인사, 균형발전 정책 담당 공무원
조사 방법	• 전화조사, FAX . E-mail 배포 및 취합
유효 표본수	• 총 105명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기간	• 2015년 1월 12일 ~ 20일, 2월 9일 ~ 13일
조사 기관	• 여민리서치컨설팅 (대표 : 이은영)

3.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하였음.



4. 응답자 특성

전 체		105	100.0%
대상	공무원	25	23.8%
	교 수	12	11.4%
	언론인	68	64.8%
성별	남 성	90	85.7%
	여 성	15	14.3%
연령별	30대 이하	47	44.8%
	40대	38	36.2%
	50대 이상	20	19.0%
균형발전과 지역민행복도	높아질 것	81	77.1%
	높아지지 않을 것	22	21.0%
	잘 모름	2	1.9%

전 체		105	100.0%
균형발전도움	도움됨	89	84.8%
	도움안됨	15	14.3%
	잘 모름	1	1.0%
균형발전정책 적절성	적절 정책	82	78.1%
	부적절 정책	22	21.0%
	잘 모름	1	1.0%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됨	93	88.6%
	도움안됨	11	10.5%
	잘 모름	1	1.0%

전 체		105	100.0%
지역인재활용	도움됨	63	60.0%
	도움안됨	40	38.1%
	잘 모름	2	1.9%
특색있는 지역발전	도움됨	63	60.0%
	도움안됨	38	36.2%
	잘 모름	4	3.8%
수도권 집중완화	도움됨	88	83.8%
	도움안됨	17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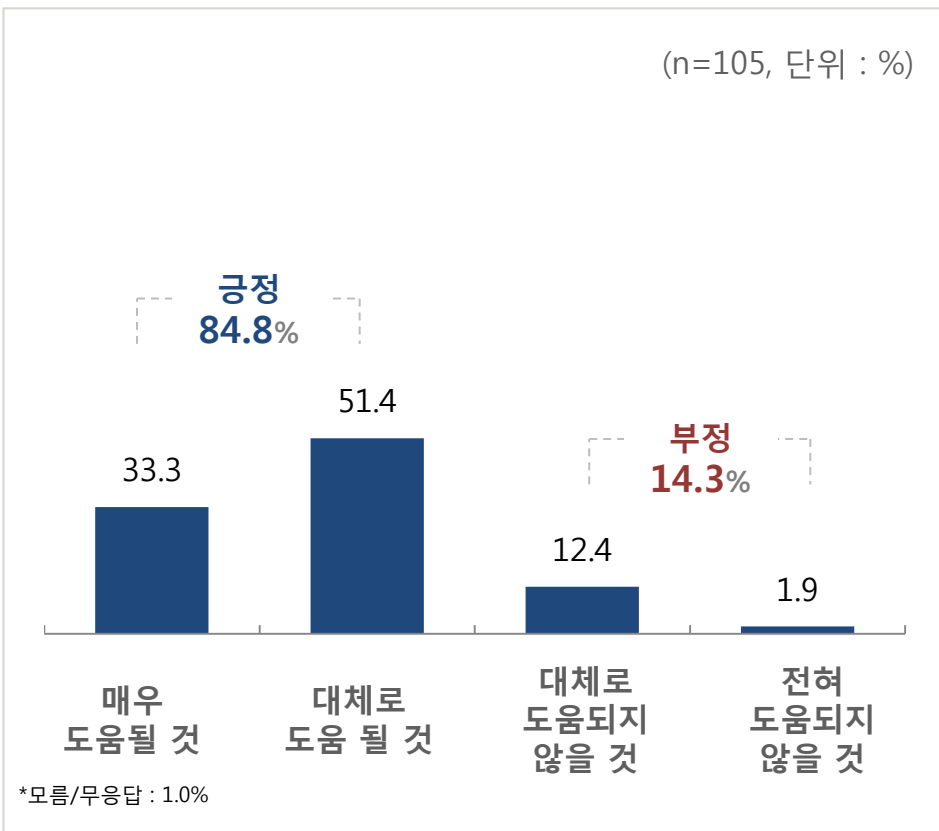
Part II. 조사 결과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도움 정도
2. 현재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적절성
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적절성 평가 이유
4.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각 분야에 주는 도움 여부
5.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민 행복도
6.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대감
7. 국가균형발전 정책 우려감
8.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더 잘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것
9.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향후 역할 전망
10. 세종시의 향후 역할 전망 이유
11.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더 잘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할 점
12.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서 잘 자리잡을지 전망
13.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 적응 전망 이유
14. 혁신도시가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할 점
15.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평가
16.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평가 이유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도움 정도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데
도움될 것이다 84.4%

(n=10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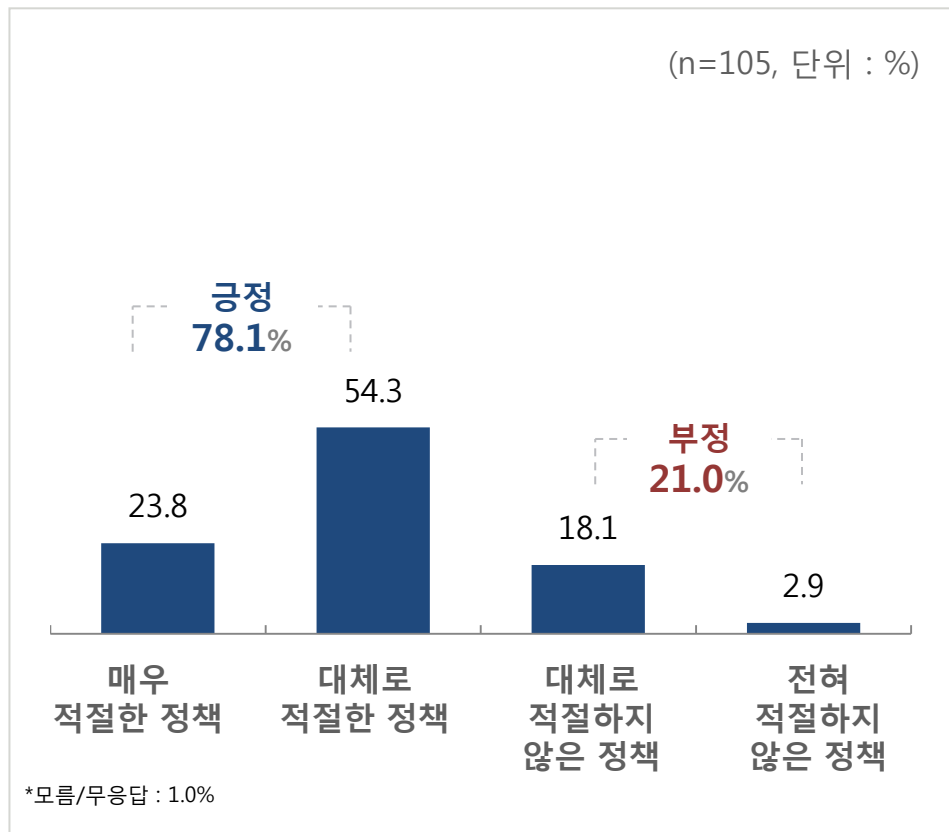
-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된 지 11년이 되는 가운데 이 정책이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가 '도움될 것'이란 답변을 함.
- '도움될 것' 의견은 84.4%(매우 도움될 것 33.3%+대체로 도움될 것 51.4%)이며 '도움되지 않을 것'(대체로 도움되지 않을 것 12.4%+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1.9%) 의견은 14.3%로 나타남.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도움 정도

		사례수	매우 도움될것	대체로 도움될것	대체로 도움되지 않을것	전혀 도움되지 않을것	도움될것	도움되지않을것	잘모름	계
			%	%	%	%	%	%	%	%
전 체		(105)	33.3	51.4	12.4	1.9	84.8	14.3	1.0	100.0
대 상	공무원	(25)	48.0	52.0	0.0	0.0	100.0	0.0	0.0	100.0
	교수	(12)	83.3	16.7	0.0	0.0	100.0	0.0	0.0	100.0
	언론인	(68)	19.1	57.4	19.1	2.9	76.5	22.1	1.5	100.0
성 별	남 성	(90)	36.7	50.0	11.1	2.2	86.7	13.3	0.0	100.0
	여 성	(15)	13.3	60.0	20.0	0.0	73.3	20.0	6.7	100.0
연 령 별	30대 이하	(47)	19.1	59.6	14.9	4.3	78.7	19.1	2.1	100.0
	40 대	(38)	42.1	44.7	13.2	0.0	86.8	13.2	0.0	100.0
	50대 이상	(20)	50.0	45.0	5.0	0.0	95.0	5.0	0.0	100.0
균형발전과 지역민 행복도	높아질 것	(81)	42.0	51.9	6.2	0.0	93.8	6.2	0.0	100.0
	높아지지 않을 것	(22)	0.0	50.0	36.4	9.1	50.0	45.5	4.5	100.0
	잘 모름	(2)	50.0	50.0	0.0	0.0	100.0	0.0	0.0	100.0
공공기관 이전 진행 평가	그럴 것	(69)	40.6	53.6	4.3	0.0	94.2	4.3	1.4	100.0
	그렇지 않을 것	(35)	17.1	48.6	28.6	5.7	65.7	34.3	0.0	100.0
	잘 모름	(1)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이전 정부 균형발전 정책 평가	추진해온 편	(29)	27.6	62.1	10.3	0.0	89.7	10.3	0.0	100.0
	추진하지 못한 편	(70)	37.1	47.1	12.9	2.9	84.3	15.7	0.0	100.0
	잘 모름	(6)	16.7	50.0	16.7	0.0	66.7	16.7	16.7	100.0

2. 현재 시점에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적절성

✓ 수도권 이전 논란 등이 있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미래효과 등을 감안해 볼 때
국가균형발전은 적절한 정책 78.1%



- 국가균형 발전 정책은 그 정책이 논의되었던 초기부터 수도권 이전 논란 등이 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이 정책을 본다면 추진 목표나 미래 효과 등을 볼때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적절했다'는 응답이 78.1%(매우 적절 23.8%+대체로 적절 54.3%)로 조사됨.
- '적절하지 않은 정책'(대체로 부적절 18.1%+매우 부적절 2.9%) 의견은 21.0%임.

2. 현재 시점에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적절성

		사례수	매우 적절한 정책	대체로 적절한 정책	대체로 적절하지 않은 정책	전혀 적절하지 않은 정책	적절한 정책	부적절한 정책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05)	23.8	54.3	18.1	2.9	78.1	21.0	1.0	100.0
대 상	공무원	(25)	48.0	48.0	4.0	0.0	96.0	4.0	0.0	100.0
	교수	(12)	66.7	25.0	8.3	0.0	91.7	8.3	0.0	100.0
	언론인	(68)	7.4	61.8	25.0	4.4	69.1	29.4	1.5	100.0
성 별	남 성	(90)	26.7	56.7	14.4	2.2	83.3	16.7	0.0	100.0
	여 성	(15)	6.7	40.0	40.0	6.7	46.7	46.7	6.7	100.0
연 령 별	30대 이하	(47)	17.0	51.1	25.5	4.3	68.1	29.8	2.1	100.0
	40 대	(38)	26.3	57.9	13.2	2.6	84.2	15.8	0.0	100.0
	50대 이상	(20)	35.0	55.0	10.0	0.0	90.0	10.0	0.0	100.0
균형발전과 지역민 행복도	높아질 것	(81)	29.6	58.0	9.9	2.5	87.7	12.3	0.0	100.0
	높아지지 않을 것	(22)	0.0	40.9	50.0	4.5	40.9	54.5	4.5	100.0
	잘 모름	(2)	50.0	50.0	0.0	0.0	100.0	0.0	0.0	100.0
공공기관 이전 진행 평가	그럴 것	(69)	26.1	59.4	13.0	0.0	85.5	13.0	1.4	100.0
	그렇지 않을 것	(35)	17.1	45.7	28.6	8.6	62.9	37.1	0.0	100.0
	잘 모름	(1)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이전 정부 균형발전 정책 평가	추진해온 편	(29)	13.8	72.4	13.8	0.0	86.2	13.8	0.0	100.0
	추진하지 못한 편	(70)	28.6	47.1	20.0	4.3	75.7	24.3	0.0	100.0
	잘 모름	(6)	16.7	50.0	16.7	0.0	66.7	16.7	16.7	100.0

3.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적절성 평가 이유

-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간 불균형 완화, 지역/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효과가 크다, 사회적 비용 감소, 지역발전에 도움, 통일시대 준비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적절하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효율적,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기반 부족, 지원 부족, 인구 유입 효과 미비, 핵심 부서가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언급함.

■ 긍정 응답 😊

[복수응답, n=105, 단위 : 명]

• 수도권 집중해소	35
• 지역간 격차/불균형 해소(완화), 균형발전	21
• 지역 경기/경제 활성화	8
• 지역간 경쟁력 강화/국가 경쟁력 강화	4
•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전망됨	3
• 지역발전에 도움	3
• 권한의 분산/주요 권력의 지방 분산 효과가 기대됨	3
•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나타남	2
• 지역성장거점 마련	2
• 효과가 크고 필요한 정책	2
• 사기업 판단 유도의 계기 마련	1
• 성장 위주 개발시대와 수도권/대도시 위주의 발전정책의 종말	1
• 공공기관의 전국적 분포는 당연한 것	1
• 사회적 비용감소	1
•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행정수도 필요	1

■ 부정 응답 😞

[복수응답, n=105, 단위 : 명]

• 비효율적/소모적	9
• 핵심부서는 서울에 있음	6
• 성급한 정책 추진(줄속정책)	2
• 사회기반 부족	2
• 인구유입효과 미비	1
• 일관성이 없는 정책	1
• 지원부족	1
•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	1
• 정책일관성 부족	1
• 정책 실효성 부족	1
• 공무원 인력대체 어려움	1

4.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각 분야에 주는 도움 여부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88.6%)와 수도권 집중 완화(83.8%)에는 도움되는 정책이나 지역 인재 활용(60.0%)이나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데(60.0%)는 도움 정도가 다소 떨어짐.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9개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활용',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 등 4가지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88.6%)이 가장 도움된다는 견해를 표출함.

(n=105, 단위 : %)

분 야	매우 도움됨	다소 도움됨	별로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	비 도움	잘 모름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	30.5	58.1	10.5	0.0	88.6	10.5	1.0
지역 인재 활용 측면	20.0	40.0	31.4	6.7	60.0	38.1	1.9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 측면	15.2	44.8	28.6	7.6	60.0	36.2	3.8
수도권 집중 완화 측면	34.3	49.5	13.3	2.9	83.8	16.2	0.0

4.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각 분야에 도움 여부

- 또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수도권 집중 완화'(83.8%) 측면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으나 '지역 인재 활용'(60.0%)이나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측면(60.0%)에 대해선 도움 정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함.
-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 대해선 40대 이상 중장년층(94 ~ 95%)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보여줌.
- '지역 인재 활용' 측면에 대해선 38.1%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연령별로는 30대(36.2%), 조사 대상별로는 언론인(48.5%)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측면과 관련해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가 36.2%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30대 이하(48.9%), 성별로는 여성층(26.7%)에서 특히 더 부정적인 의견을 냄.
- '수도권 집중 완화' 측면에 대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도움된다'는 응답이 83.8%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기본 취지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 완화에는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음.

4.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각 분야에 주는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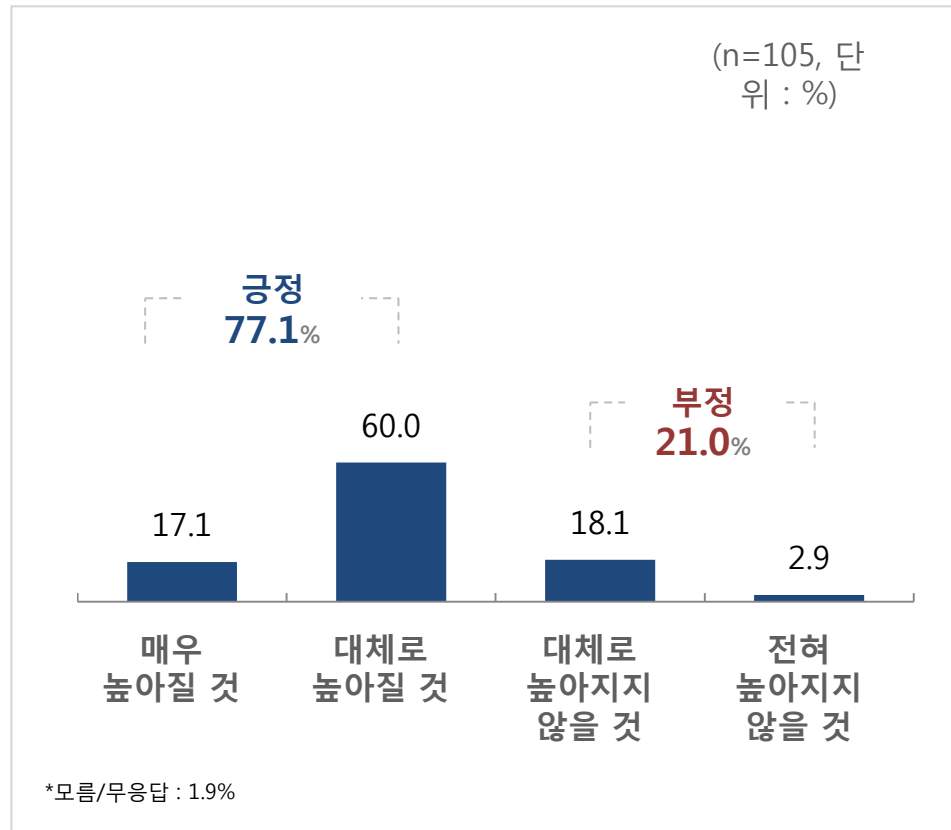
(n=105, 단위 : %)

			사례수	매우 도움됨	다소 도움됨	별로 도움되지 않음	거의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도움안됨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05)	30.5	58.1	10.5	10.5	88.6	10.5	1.0	100.0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대상	공무원	(25)	48.0	52.0	0.0	0.0	100.0	0.0	0.0	100.0
		교 수	(12)	41.7	50.0	8.3	8.3	91.7	8.3	0.0	100.0
		언론인	(68)	22.1	61.8	14.7	14.7	83.8	14.7	1.5	100.0
	연령	30대 이하	(47)	21.3	59.6	17.0	17.0	80.9	17.0	2.1	100.0
		40대	(38)	39.5	55.3	5.3	5.3	94.7	5.3	0.0	100.0
		50대 이상	(20)	35.0	60.0	5.0	5.0	95.0	5.0	0.0	100.0
전 체			(105)	20.0	40.0	31.4	6.7	60.0	38.1	1.9	100.0
지역인재 활용측면	대상	공무원	(25)	32.0	48.0	16.0	4.0	80.0	20.0	0.0	100.0
		교 수	(12)	16.7	66.7	16.7	0.0	83.3	16.7	0.0	100.0
		언론인	(68)	16.2	32.4	39.7	8.8	48.5	48.5	2.9	100.0
	연령	30대 이하	(47)	10.6	25.5	48.9	10.6	36.2	59.6	4.3	100.0
		40대	(38)	31.6	47.4	18.4	2.6	78.9	21.1	0.0	100.0
		50대 이상	(20)	20.0	60.0	15.0	5.0	80.0	20.0	0.0	100.0
전 체			(105)	15.2	44.8	28.6	7.6	60.0	36.2	3.8	100.0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측면	대상	공무원	(25)	28.0	56.0	16.0	0.0	84.0	16.0	0.0	100.0
		교 수	(12)	25.0	50.0	16.7	0.0	75.0	16.7	8.3	100.0
		언론인	(68)	8.8	39.7	35.3	11.8	48.5	47.1	4.4	100.0
	연령	30대 이하	(47)	10.6	38.3	38.3	12.8	48.9	51.1	0.0	100.0
		40대	(38)	13.2	52.6	21.1	5.3	65.8	26.3	7.9	100.0
		50대 이상	(20)	30.0	45.0	20.0	0.0	75.0	20.0	5.0	100.0
전 체			(105)	34.3	49.5	13.3	2.9	83.8	16.2	0.0	100.0
수도권 집중 완화측면	대상	공무원	(25)	52.0	44.0	4.0	0.0	96.0	4.0	0.0	100.0
		교 수	(12)	41.7	33.3	25.0	0.0	75.0	25.0	0.0	100.0
		언론인	(68)	26.5	54.4	14.7	4.4	80.9	19.1	0.0	100.0
	연령	30대 이하	(47)	23.4	55.3	14.9	6.4	78.7	21.3	0.0	100.0
		40대	(38)	42.1	44.7	13.2	0.0	86.8	13.2	0.0	100.0
		50대 이상	(20)	45.0	45.0	10.0	0.0	90.0	10.0	0.0	100.0

5.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지역민 행복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역민들의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중심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아질 것 77.1%



-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아질 것 같은지를 질문한 결과,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77.1%로 나타나 전문가 10명중 7명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행복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
-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은 21.0%임.
- (대체로 높아지지 않을 것 18.1%+전혀 높아지지 않을 것 2.9%)

5.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지역민 행복도

(n=105, 단위 : %)

		사례수	매우 높아질 것	대체로 높아질 것	대체로 높아 지지 않을 것	전혀 높아 지지 않을 것	높아질 것	높아 지지 않을 것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05)	17.1	60.0	18.1	2.9	77.1	21.0	1.9	100.0
대 상	공무원	(25)	24.0	68.0	8.0	0.0	92.0	8.0	0.0	100.0
	교 수	(12)	41.7	50.0	0.0	0.0	91.7	0.0	8.3	100.0
	언론인	(68)	10.3	58.8	25.0	4.4	69.1	29.4	1.5	100.0
성 별	남 성	(90)	20.0	60.0	15.6	2.2	80.0	17.8	2.2	100.0
	여 성	(15)	0.0	60.0	33.3	6.7	60.0	40.0	0.0	100.0
연 령 별	30대 이하	(47)	6.4	61.7	23.4	6.4	68.1	29.8	2.1	100.0
	40 대	(38)	18.4	68.4	13.2	0.0	86.8	13.2	0.0	100.0
	50대 이상	(20)	40.0	40.0	15.0	0.0	80.0	15.0	5.0	100.0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평가	그럴 것	(74)	23.0	63.5	10.8	0.0	86.5	10.8	2.7	100.0
	그렇지 않을 것	(29)	3.4	51.7	34.5	10.3	55.2	44.8	0.0	100.0
	잘 모름	(2)	0.0	50.0	50.0	0.0	50.0	50.0	0.0	100.0
공공기관 이전 진행 평가	그럴 것	(69)	21.7	62.3	14.5	0.0	84.1	14.5	1.4	100.0
	그렇지 않을 것	(35)	8.6	57.1	25.7	8.6	65.7	34.3	0.0	100.0
	잘 모름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이전 정부 균형발전 정책 평가	추진해온 편	(29)	17.2	65.5	17.2	0.0	82.8	17.2	0.0	100.0
	추진하지 못한 편	(70)	18.6	58.6	17.1	4.3	77.1	21.4	1.4	100.0
	잘 모름	(6)	0.0	50.0	33.3	0.0	50.0	33.3	1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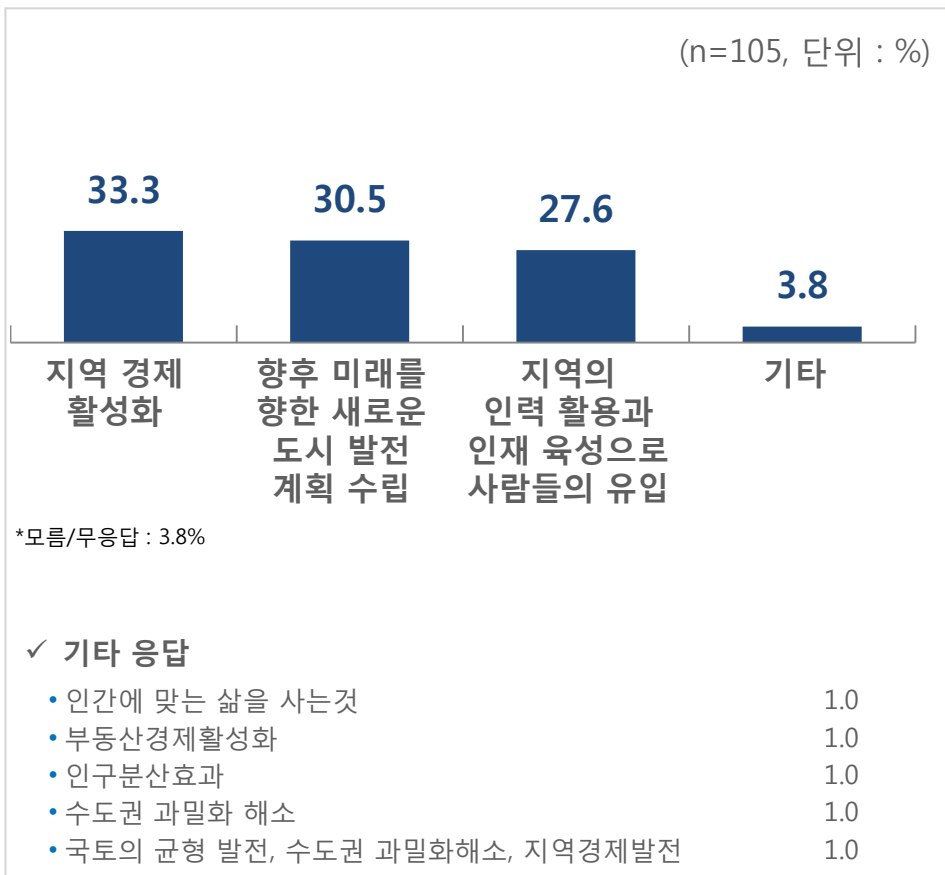
6. 국가균형 발전 정책 기대감



가장 큰 기대감은 1순위로 지역 경제 활성화(33.3%)를 꼽았으며

향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시발전 계획 수립 의견이 30.5%로 침체된 지역에 희망이 되길 바랍

(n=105, 단위 : %)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 가장 기대되는 것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33.3%)가 1위, 그 다음이 '향후 미래를 행한 새로운 도시발전 계획 수립'(30.5%), '지역의 인력 활용과 인재 육성으로 사람들의 유입'(27.6%)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냄.
- 기타 의견으로는 '인간에 맞는 삶을 사는 것'(1.0%), '부동산 경제 활성화'(1.0%), '인구분산 효과'(1.0%), '수도권 과밀화 해소'(1.0%),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경제 발전 모두'(1.0%) 등이 있었음. 기타 의견으로는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와 관련한 의견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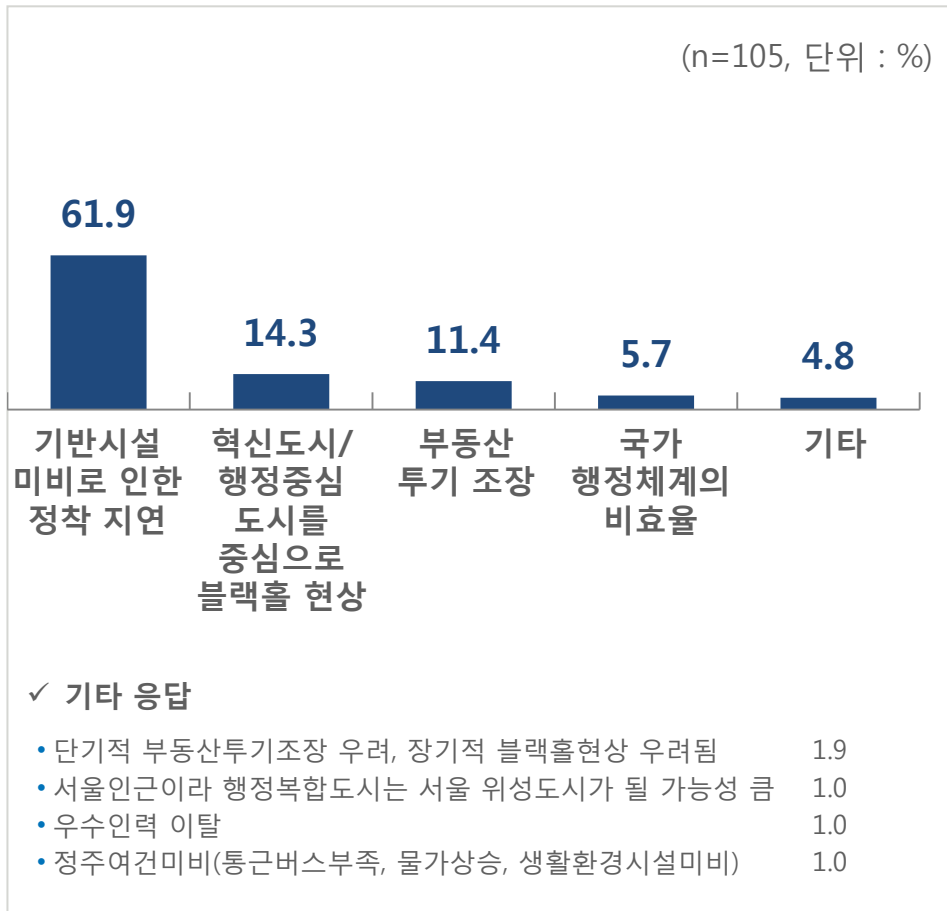
6. 국가균형 발전 정책 기대감

(n=105, 단위 : %)

		사례수	지역 경제 활성화	향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시 발전 계획 수립	지역의 인력 활용과 인재 육성으로 사람들의 유입	잘 모름	인간에 맞는 삶을 사는 것	부동산 경제 활성화	인구분산 효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의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경제 발전	계
			%	%	%	%	%	%	%	%	%	%
전 체		(105)	33.3	30.5	27.6	3.8	1.0	1.0	1.0	1.0	1.0	100.0
대 상	공무원	(25)	40.0	44.0	12.0	0.0	4.0	0.0	0.0	0.0	0.0	100.0
	교 수	(12)	25.0	16.7	58.3	0.0	0.0	0.0	0.0	0.0	0.0	100.0
	언론인	(68)	32.4	27.9	27.9	5.9	0.0	1.5	1.5	1.5	1.5	100.0
성 별	남 성	(90)	33.3	30.0	28.9	2.2	1.1	1.1	1.1	1.1	1.1	100.0
	여 성	(15)	33.3	33.3	20.0	13.3	0.0	0.0	0.0	0.0	0.0	100.0
연 령 별	30대 이하	(47)	34.0	34.0	19.1	6.4	0.0	2.1	2.1	2.1	0.0	100.0
	40 대	(38)	34.2	36.8	26.3	0.0	0.0	0.0	0.0	0.0	2.6	100.0
	50대 이상	(20)	30.0	10.0	50.0	5.0	5.0	0.0	0.0	0.0	0.0	100.0

7. 국가균형 발전 정책 우려감

- ✓ 10명 중 6명은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정착 지연(61.9%)을 꼽아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시설 불편으로 이전 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는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정착 지연'(61.9%)이 압도적으로 응답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은 이전되었지만 의료, 교육 등 생활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임.
- '혁신도시/행정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블랙홀 현상'(14.3%)이나 '부동산 투기 조장'(11.4%)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기타 의견으로 '국가 행정체계의 비효율'(5.7%)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화상회의 활성화' 등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행정복합도시가 수도권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위성도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와 함께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이 오히려 빠져나갈 것'이란 지적도 소수 의견(1.0%)으로 있었음.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장이 우려된다는 점과 정주여건 미비로 생활 불편함 등의 의견도 제기됨.

8.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더 잘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앙 정부 스스로의 권한 이양에 대한 의지 표명 및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크게 6가지 정도가 언급됨.
-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지방 재정을 더 튼튼하게 강화하는 것과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 정부의 지방세 규모를 확대하고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조세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함.
- 특히 현재의 국세 8과 지방세 2의 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다음으로는 지방으로의 권한을 이양하는 노력과 실질적인 이양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앙 정부 스스로도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단 언급이 있었음.
- 아울러, 학교와 기업 등 좀 더 많이 민간 기관들이 더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 외에 안행부가 현재 서울에 있는데 안행부 지방 이전 의견과 국회, 청와대 이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음.
- 또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과의 보다 많은 소통 노력을 통해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지역의 특색있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 전반적으로 중앙 정부 스스로의 권한 이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이 많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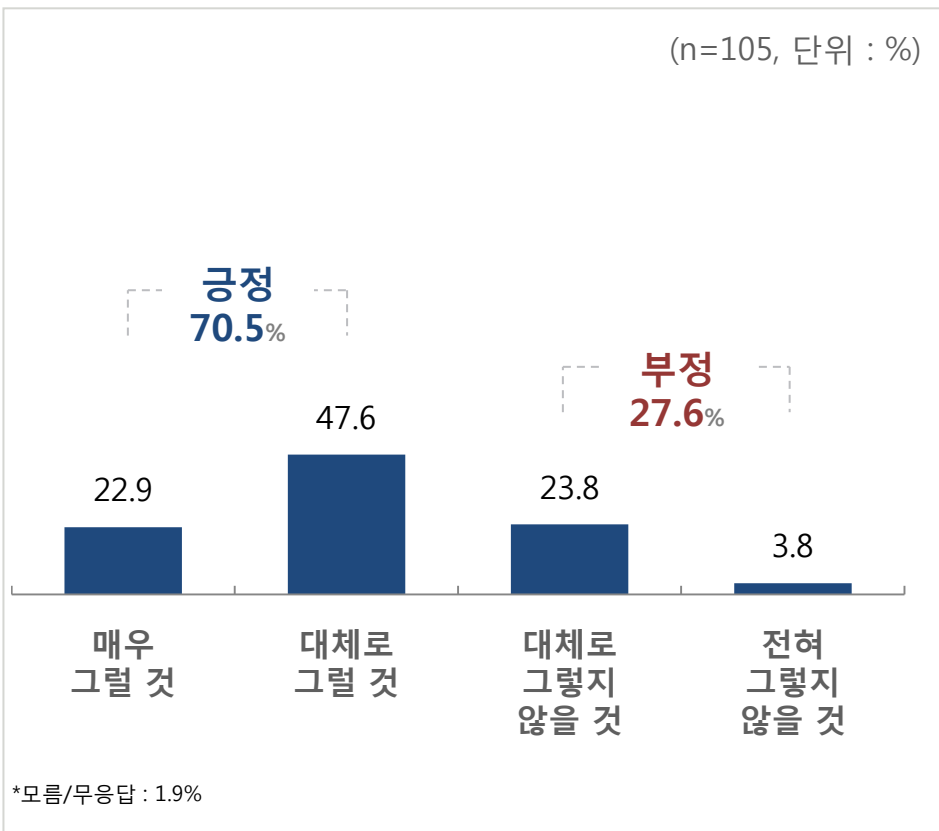
9.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향후 역할 전망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역할 할 것 70.5%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적 전망이 81.6%로 나타나 기대감이 큰 편

(n=105, 단위 : %)



- 현재의 세종시는 2002년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된 도시로 현재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시에 이전한 상태인데 세종시가 향후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70.5%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적 전망이 81.6%로 높게 나타나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있어 40대의 기대감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음.

9.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향후 역할 전망

(n=105, 단위 : %)

		사례수	매우 그럴 것	대체로 그럴 것	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그럴 것	그렇지 않을 것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05)	22.9	47.6	23.8	3.8	70.5	27.6	1.9	100.0
대 상	공무원	(25)	36.0	52.0	4.0	0.0	88.0	4.0	8.0	100.0
	교수	(12)	41.7	41.7	16.7	0.0	83.3	16.7	0.0	100.0
	언론인	(68)	14.7	47.1	32.4	5.9	61.8	38.2	0.0	100.0
성 별	남 성	(90)	24.4	46.7	22.2	4.4	71.1	26.7	2.2	100.0
	여 성	(15)	13.3	53.3	33.3	0.0	66.7	33.3	0.0	100.0
연 령 별	30대 이하	(47)	14.9	44.7	34.0	6.4	59.6	40.4	0.0	100.0
	40 대	(38)	23.7	57.9	15.8	0.0	81.6	15.8	2.6	100.0
	50대 이상	(20)	40.0	35.0	15.0	5.0	75.0	20.0	5.0	100.0
균형발전과 지역민 행복도	높아질 것	(81)	28.4	50.6	18.5	1.2	79.0	19.8	1.2	100.0
	높아지지 않을 것	(22)	4.5	31.8	45.5	13.6	36.4	59.1	4.5	100.0
	잘 모름	(2)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이전 정부 균형발전 정책 평가	추진해온 편	(29)	27.6	55.2	13.8	3.4	82.8	17.2	0.0	100.0
	추진하지 못한 편	(70)	22.9	44.3	27.1	4.3	67.1	31.4	1.4	100.0
	잘 모름	(6)	0.0	50.0	33.3	0.0	50.0	33.3	16.7	100.0

10. 세종시 향후 역할 전망 이유

-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교육기관들이 이전했기 때문, 행정기관이 모두 내려왔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언급함.
-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핵심기관/부서는 이전 안함, 주거환경, 사회기반 부족 등의 이유를 제기함.

■ 긍정 응답 😊

[복수응답, n=105, 단위 : 명]

•인구유입 효과 기대	10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도 함께 이전	6
•시간이 지날수록 본연의 기능 활성화	6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능 수행	5
•행정부처가 모여있어서	4
•행정기관들이 주요정책 입안을 추진하기 때문	3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임	2
•중앙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2
•지방입장에서 행정추진	2
•지역발전기여	2
•수도권 과밀화 해소	2

■ 부정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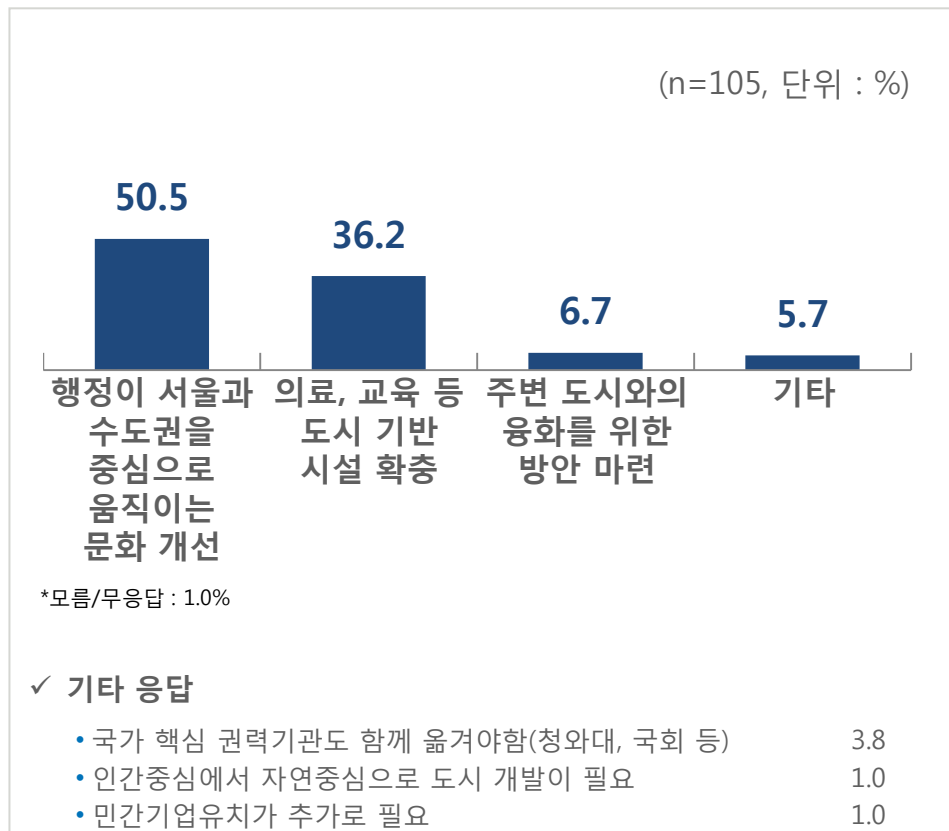
[복수응답, n=105, 단위 : 명]

•핵심 기관은 수도권에서 관리	13
•비효율적임	6
•사회기반 부족	4
•생산기반 부족으로 자급자족 불가	1
•행정기관 이전 이외에 다른 효과 없음	1
•공무원 이동만으로 한계가 있음	1
•지방이기때문에 고급인력의 유입이 떨어짐	1
•행정부서만 이동함	1
•주거환경이 불안정함	1
•정부의 의지부족	1
•통일시대에 맞지 않음	1

* 긍정 응답 사례수 2명 이상 응답만 제시

11.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더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할 점

- ✓ **행정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문화의 개선이 50.5%로 과반 넘어**
교육, 의료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36.2%



-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더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행정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문화 개선'이라는 응답이 50.5%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화와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는 '의료, 교육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36.2%)이 꼽혔는데 이는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대한민국의 변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기반시설 미비에 대한 우려감이 컸듯이, 세종시 역시 향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은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주변 도시와의 융화를 위한 방안 마련' 부분은 6.7%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 '청와대 국회 등도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3.8%)는 의견과 '자연중심 도시로의 개발'(1.0%), '민간 기업 유치'(1.0%) 등의 의견이 보완사항으로 언급됨.

11.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더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할 점

(n=10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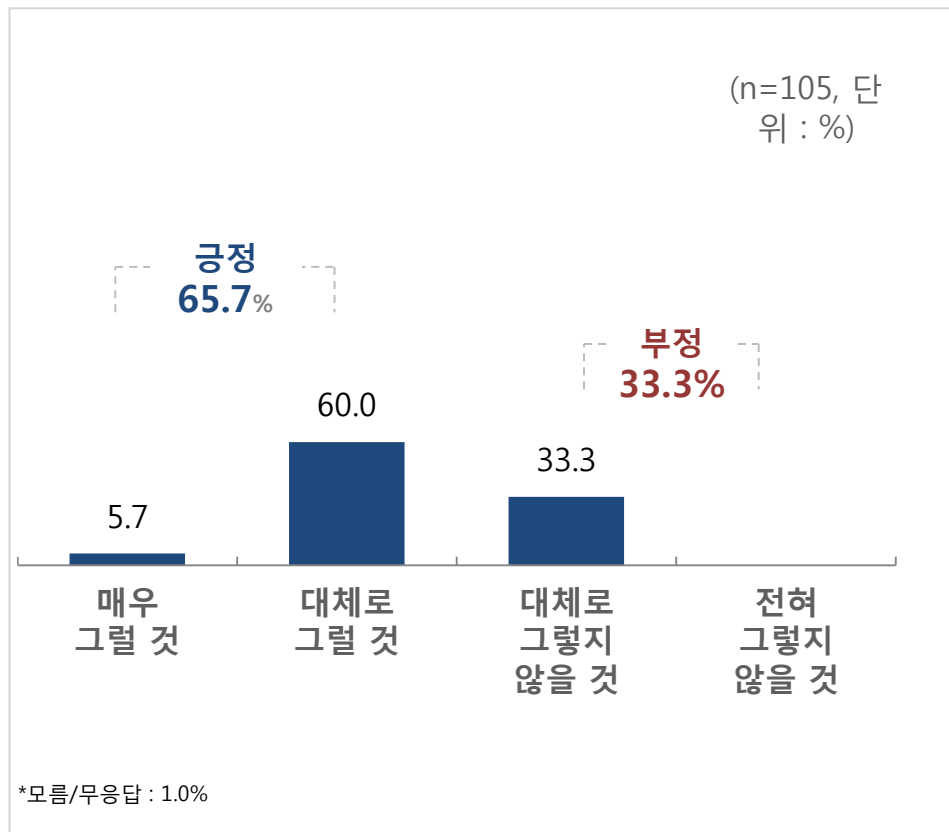
		사례수	행정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문화 개선	의료, 교육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주변 도시와의 융화를 위한 방안 마련	국가 핵심 권력기관도 함께 옮겨야함 (청와대, 국회 등)	잘 모름	인간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필요	민간기업 유치가 추가로 필요	계
			%	%	%	%	%	%	%	%
전 체		(105)	50.5	36.2	6.7	3.8	1.0	1.0	1.0	100.0
대 상	공무원	(25)	44.0	40.0	12.0	0.0	0.0	4.0	0.0	100.0
	교수	(12)	58.3	25.0	0.0	8.3	8.3	0.0	0.0	100.0
	언론인	(68)	51.5	36.8	5.9	4.4	0.0	0.0	1.5	100.0

12.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서 잘 자리잡을지 전망



9개 혁신도시 등이 지역사회에서 잘 자리를 잡아갈 것 65.7%

언론인과 여성층에서 긍정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사회와 밀착되는 프로그램 필요



- 9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의 이전작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들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잘 자리를 잡아갈 것인 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65.7%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역할 평가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임.
- 언론인(긍정 61.8% vs. 부정 38.2%)과 여성층(긍정 53.3% vs. 부정 46.7%)에서 공공기관들의 지역 정착에 대해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전작업이 최근에 마무리 되어 지역 사회와 융화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임.
- 아울러 공공기관 스스로도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 밀착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12.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서 잘 자리잡을지 전망

(n=105, 단위 : %)

		사례수	매우 그럴것	대체로 그럴것	대체로 그렇지않을것	그럴것	그렇지 않을것	잘 모름	계
			%	%	%	%	%	%	%
전 체		(105)	5.7	60.0	33.3	65.7	33.3	1.0	100.0
대 상	공무원	(25)	12.0	60.0	28.0	72.0	28.0	0.0	100.0
	교수	(12)	16.7	58.3	16.7	75.0	16.7	8.3	100.0
	언론인	(68)	1.5	60.3	38.2	61.8	38.2	0.0	100.0
성 별	남 성	(90)	6.7	61.1	31.1	67.8	31.1	1.1	100.0
	여 성	(15)	0.0	53.3	46.7	53.3	46.7	0.0	100.0
연 령 별	30대 이하	(47)	6.4	55.3	38.3	61.7	38.3	0.0	100.0
	40 대	(38)	0.0	65.8	34.2	65.8	34.2	0.0	100.0
	50대 이상	(20)	15.0	60.0	20.0	75.0	20.0	5.0	100.0
균형발전과 지역민 행복도	높아질 것	(81)	7.4	64.2	28.4	71.6	28.4	0.0	100.0
	높아지지않을 것	(22)	0.0	45.5	54.5	45.5	54.5	0.0	100.0
	잘 모름	(2)	0.0	50.0	0.0	50.0	0.0	50.0	100.0

13.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 적응 전망 이유

- ‘잘 자리잡을 것’이란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므로, 인구 유입, 민간이 함께 이전했기 때문에, 기반 도시로 육성할 것 같아서,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지자체에 중앙 정부 지원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등을 제시함.
- ‘잘 자리잡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견해는
인프라 부족, 혁신도시 공동화, 조직 불안정, 이전 효과분석 없이 추진 등의 의견을 제시함.

■ 긍정 응답 😊

[복수응답, n=105, 단위 : 명]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에 잘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16
•지역경제 활성화	7
•균형발전에 기여	4
•일자리 창출	4
•지역인재 활성화	4
•인구유입	4
•민간도 함께 이전	3
•인프라 구축	3
•우수인재 유입	3

■ 부정 응답 😞

[복수응답, n=10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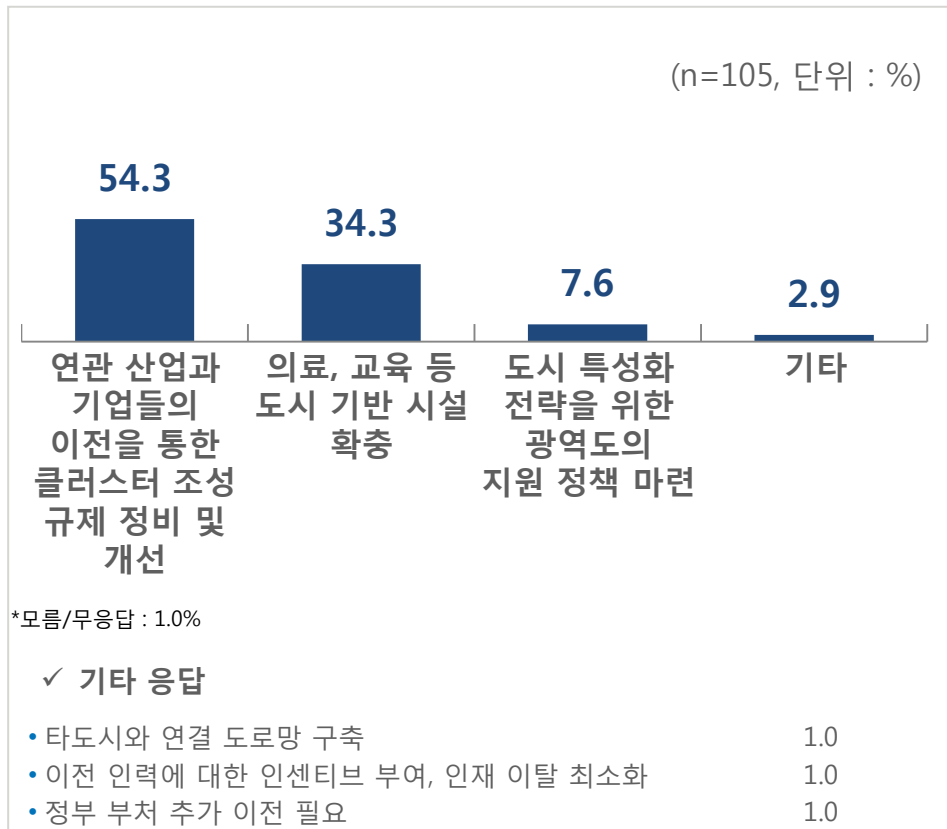
•인프라 부족	9
•혁신도시 공동화	4
•지역에 동화되기 어려움	4
•지방이전 공무원 이탈가속/우수인력충원 어려움	4
•비효율적	4
•혁신도시 산발적 추진보다 세종시로 일원화가 효과적	2
•업무만 혁신도시로 이전, 본기능은 수도권 유지	2
•국회나 중앙정부 의존률이 높음	2
•공공기관만으로 민간유입동력 약함	2
•정책지속성에 대한 비전이 약함	2

* 사례수 2명 이상 응답만 제시

14. 혁신도시가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할 점



연관산업과 기업들의 이전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 및 규제정비 54.3%로 1위
의료, 교육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의견(34.3%)이 2순위



- 혁신도시들이 더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연관 산업과 기업들의 이점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 규제 정비 및 개선'이 54.3%로 1순위에 응답됨.
- 이는 세종특별시가 '수도권 중심'의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그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비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들의 지역 이전 이후에도 연관 기업들이 더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규제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역을 클러스터 단지화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음.
- 2순위로는 혁신도시 역시 '의료, 교육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의견(34.3%)이 꼽힘.
- '도시 특성화 전략을 위한 광역도의 지원정책 마련' 의견은 7.6%로 당장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줌.
- 이 외에 소수 의견으로 '타 도시와의 연결도로망 구축'(1.0%), '이전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이탈 최소화'(1.0%), '혁신 도시로의 정부부처 추가 이전'(1.0%) 등이 언급되었음.

14. 혁신도시가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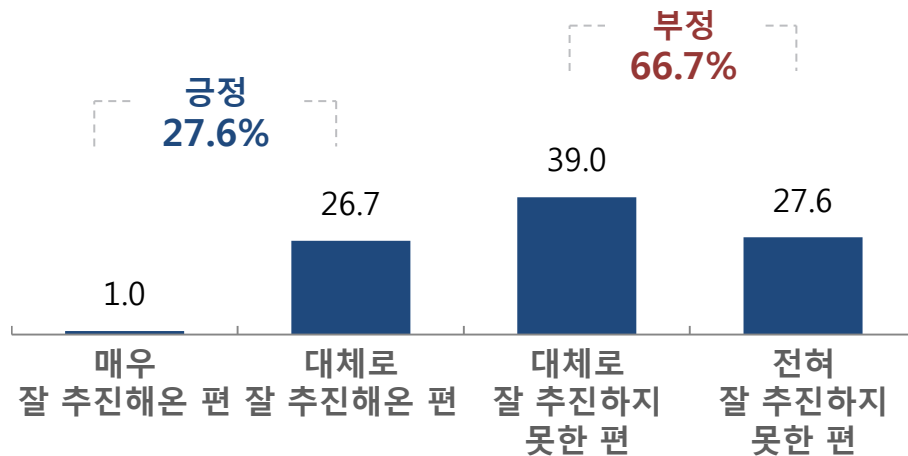
(n=105, 단위 : %)

		사례수	연관 산업과 기업들의 이전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 규제 정비 및 개선	의료, 교육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도시 특성화 전략을 위한 광역도의 지원 정책 마련	잘 모름	타도시와 연결 도로망 구축	이전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인재 이탈 최소화	정부 부처 추가 이전 필요	계
			%	%	%	%	%	%	%	%
전 체		(105)	54.3	34.3	7.6	1.0	1.0	1.0	1.0	100.0
대 상	공무원	(25)	44.0	32.0	20.0	0.0	4.0	0.0	0.0	100.0
	교 수	(12)	66.7	25.0	8.3	0.0	0.0	0.0	0.0	100.0
	언론인	(68)	55.9	36.8	2.9	1.5	0.0	1.5	1.5	100.0

15.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평가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지 못한 편이란 부정적 의견이 66.7%

(n=105, 단위 : %)



*모름/무응답 : 5.7%

-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추진해온 편'이란 의견은 27.6%로 응답되었고 '추진하지 못한 편'이란 의견이 66.7%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조사됨.
- 세종특별시로 정부 청사 이전과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지만 이전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는 인식이 전문가들에게 있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은 지난 10년 보다는 앞으로의 과제들이 더 많이 대두될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됨.

15.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평가

(n=105, 단위 : %)

		사례수	매우 잘 추진해온 편	대체로 잘 추진해온 편	대체로 잘 추진하지 못한 편	전혀 잘 추진하지 못한 편	추진해온 편	추진 하지 못한 편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05)	1.0	26.7	39.0	27.6	27.6	66.7	5.7	100.0
대 상	공무원	(25)	4.0	20.0	44.0	24.0	24.0	68.0	8.0	100.0
	교 수	(12)	0.0	0.0	8.3	91.7	0.0	100.0	0.0	100.0
	언론인	(68)	0.0	33.8	42.6	17.6	33.8	60.3	5.9	100.0
성 별	남 성	(90)	1.1	25.6	38.9	28.9	26.7	67.8	5.6	100.0
	여 성	(15)	0.0	33.3	40.0	20.0	33.3	60.0	6.7	100.0
연 령 별	30대 이하	(47)	2.1	27.7	51.1	10.6	29.8	61.7	8.5	100.0
	40 대	(38)	0.0	28.9	36.8	31.6	28.9	68.4	2.6	100.0
	50대이상	(20)	0.0	20.0	15.0	60.0	20.0	75.0	5.0	100.0
균형발전과 지역민 행복도	높아질 것	(81)	1.2	28.4	35.8	30.9	29.6	66.7	3.7	100.0
	높아지지 않을 것	(22)	0.0	22.7	54.5	13.6	22.7	68.2	9.1	100.0
	잘 모름	(2)	0.0	0.0	0.0	50.0	0.0	50.0	50.0	100.0

16.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평가 이유

- '추진해온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종시로 인구가 증가하므로 등 세종시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것이 많았음.
- '추진해오지 않은 편'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처음 기획된 취지와 달라져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국회/청와대 이전에 미온적이어서 등을 언급함.

■ 긍정 응답 😊

[복수응답, n=105, 단위 : 명]

-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과 진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6
- 전 정부의 정책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임 6
- 어느 정도 자리잡고 효과가 나타남 2
- 향후 적극적인 정책수립 전망 1
- 세종시 인구 증가 1
- 시도에 의미가 있다 1
-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봄 1

■ 부정 응답 😞

[복수응답, n=105, 단위 : 명]

- 국가균형발전(이전) 의지가 약함 15
- 국가균형발전 역주행(수도권 규제완화, 공약불이행 등) 10
- 처음 기획된 취지와 달리 변질됨 7
-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정책이 없다 5
- 정치적으로 활용됨 4
- 실효성 있는 정책 부재 3
- 형식적으로 진행 2
-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 미비 2
- 세밀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진행 2
- 뚜렷한 성과가 없음 2

* 부정 응답 사례수 2명 이상 응답만 제시

감사합니다